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협약 체결

전북자치도, 7개 금융기관 · 전북신보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3750억원 규모 직 · 간접지원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와 금융기관 등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3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9개 시군은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듬자금 금융지원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 금융기관이 협력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보듬자금 금융지원 사업은 총 3,75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400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출연금 역시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북자치도는 20억 원, 9개 시군은 42억 원, 금융기관은 146억 원, 신용보증재단은 92억 원을 각각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보듬자금 지원 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이 매칭 출연한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이 출연한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형태다.

직접지원 대상은 △경영 애로 기업(최대 7,000만원) △재단과 첫 거래 기업(최대 1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최대 2억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8년(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또는 8년 분할상환)이다. 간접지원은 9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시군별 협약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도 연 1~3%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대출금리 부담을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17일 전북농협 2층 대강당에서 '전북농협을 빛낸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해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농협, 우수 농축협 시상식

"올해도 도민 · 조합원 실익증진 최선"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17일 전북농협 2층 대강당에서 '전북농협을 빛낸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해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농협은 2024년 모든 임직원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안정화와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 실익증진의 결실과 중앙회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종합업적평가' 최우수(1위) 농협 3개소(남원축협, 익산원협, 남원원협), 우수상(2위) 2개소(구천동농협, 정읍원협), 우수상(3위) 3개소(삼기농협, 백운농협, 임실축협), '상호금융대상평가' 최우수 농협 3개소(남원축협, 익산원협, 용진농협), 우수상(1위) 1개소(남원원협), 우수상(2위) 3개소(삼기농협, 변산농협, 정읍원협), 우수상(3위) 6개소(화산농협, 구천동농협, 고산농협, 순창농협, 임실치즈농협, 오산농협), '농업경제사업대상' 1개소(고산농협), '자재사업연도대상' 1개소(광활농협), '농협판매대상(산지판매)' 우수상 1개소(진안농협) 등 총 17개 농축협(7개 중복수상)이 수상했다.

이정환 전북본부장은 "전북농협 임직원은 2025년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조합원들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 - 완주군청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14일 완주군청과 합동으로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산불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전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력설비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설비로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公, '청렴한 KRC' 실현 윤리경영 고도화 박차

이병호 사장 주도 윤리 · 인권주간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한 KRC' 실현을 위한 윤리경영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병호 사장의 주도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매달 임직원에게 청렴 메시지 'From CEO'를 발송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현장경영을 강화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또한 윤리·인권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윤리·인권 주간'을 운영했다. 윤리·인권경영헌장 현판식을 시작으로 △조직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 △윤리·인권 영화 상영 및 특강 △청렴·갑질 수준 자가 진단(CLEAN 온도계) △반부패·청렴 교육 등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윤리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민간에도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윤리교육을 시행하고, 57개 협력사와 청렴·소통 간담회를 추진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과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대외 인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공사는 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감사원의 내부통제 평가모델인 'INTOSAI GOV 9100' 인증을 획득하며 공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내부통제를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 윤리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의, 경영지원전문가 자문단 출범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1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을 갖은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은 세무, 노무, 법무, 건축, 회계, 관세 등 7개 분야 전문가 집단 4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전주상의 경영지원 자문단은 앞으로 전주상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에 대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야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각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회원기업의 경영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김정태 회장은 "최근 경영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기 화재 · 사고 예방 강화

산업부, 첫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1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산업계·전문가·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현장 중심의 유연한 안전관리, 첨단기술 활용, 민간주도 안전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객이 많은 방탈출카페 등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시범 설치해 화재 위험을 줄인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차등적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변압기의 설비 용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춰 조정한다. 또한, 전기설비 무정전 검사 제도 개편 및 전기 사고·불합격률 등을 고려한 검사 주기 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지능형 원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화재를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안전산업 육성과 함께 전기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이 스스로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진단 앱을 보급하고, 전기 계측장비의 교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만호기자